

# FTA 이후 양돈산업 가축분뇨 처리방향에 대한 제언



이 상 국 지부장  
대한양돈협회 울산지부

## 1. 머리말

한국과 FTA 체결 대상국인 칠레, 미국, EU 국가들은 세계 양돈 선진국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 산 쇠고기 국내 수입으로 인해 돼지고기 대체 육류로 소비자에게 각광받고 있는 현시점에서 가축분뇨 처리 하나 변변치 못한 국내에서 양돈을 생업으로 영위하는 양돈농가의 입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허탈감과 불안감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현실이다.

가축분뇨 해양배출을 정부에서 가축분뇨 처리로 인정한 후, 수 년 동안 톤당 10,000원 전후에서 처리비용을 농가에서 부담하여 왔으나, 급작스러운 해양배출 감축정책 발표 후, 배출업체에서는 2~3년 동안 무려 250%의 처리비용을 인상함으로써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농가의 아픔을 가중시키고 있다.

## 2. 톤당 2만5천원의 분뇨처리비 탈피해야

양돈농가 입장은 해양배출 기간의 연장이 아니라, 톤당 25,000원이라는 가축분뇨 처리비에서 하루라도 빨리 탈피해야 만이 농가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양배출 농가들이 가축분뇨의 개별처리를 하고자 해도

첫째, 정부에서 가축분뇨 해양배출을 가축분뇨 처리로 인정함으로써 농가의 기존 설비가 현재 모두 폐쇄된 상태이며

둘째, 기존설비가 존재하더라도 환경법의 강화로 기존설비가 유명무실한 상태이며

셋째, 설비를 새로 설치하려고 해도 경제적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과거 가축분뇨의 개별농가 실패에 따른 경험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처럼 톤당 25,000원이라는 생산비 과중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갈등이라는 진퇴양난에 처해 있는 것이 양돈농가의 현실이다.

### 3. 농민보호는 국가의 의무

정부가 국익을 위해 FTA를 체결하였다면, FTA로 인해 희생양으로 전락해 버린 우리 농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지난 10여 년 동안 가축분뇨 처리에 수조원을 투여해도 왜? 아직까지도 가축분뇨 처리대안 마련에 급급해야 하는가? 그것은 환경에 무지한 우리 농민의 탓만이 아니고 오로지 현실에 급급한 정책 입안이 원인이 아닐까?

물론 현재의 현실에서 양돈농가 또한, 해양배출로써만 가축분뇨 처리에 의존한다면 우리 양돈산업의 자생력과 경제력은 잃고 자멸하고 말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법의 잣대로 무조건 해양배출 중단을 추진한다면 양돈농가들은 범법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신속한 정부의 중장기적 대책 마련과 과감한 예산 투여만이 해양도 살리고 양돈산업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 4. 현 가축분뇨처리 정책의 문제점

우린 지난 10여 년 동안 1조5천억이라는 정부예산을 가축분뇨 개별농가 및 공동처리장에 쏟아부었으나, 현 시점에서 농가부채 외 무엇하나 뚜렷한 결실이 있는가? 우리 정부의 가축분뇨처리 정책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많은 예산 투여와 전문가를 투여하여 설비 가능한 공공처리장도 가동하다 중단하는 시점에서 영세하고 환경에 무지한 농가에게 가축분뇨를 처리하라는 그 발상은 양돈농가가 받아들이기에는 어깨가 너무나 무겁다.

결국, 우리 농가를 범법자로 만들고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내몰자는 정책의 오류라고 판단된다. 자연순환농업 또한, 향후 한중 및 농업 강대국과 FTA 체결시 농산물 수입으로 경종농가 및 수도작 농가의 폐업 속출로 인해 양돈산업의 가축분뇨처리에 있어, 또 다시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양돈농가로서는 걱정이다.

이제, 과거의 개별농가 처리 및 공동처리장 처리방식으로만 해결하려는 접근을 또 다시 답습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책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FTA가 정부의 국익을 위해 체결해야 한다면 피해자인 농가를 위해 농가 스스로 불가항력적인 가축분뇨처리 부분은 정부의 역량으로 우리 농가는 생산성 향상으로 정부와 농가가 역할 분담을 할 때만이 양돈산업의 미래가 있고, 농촌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지름길이라 믿는다.



“

FTA가 정부의 국익을 위해 체결해야 한다면 피해자인 농가를 위해 농가 스스로 불가항력적인 가축분뇨처리 부분은 정부의 역량으로 우리 농가는 생산성 향상으로 정부와 농가가 역할 분담을 할 때만이 양돈산업의 미래가 있고, 농촌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

## 5. 맺음말

우리 양돈산업도 농촌 환경과 여건에 어우러져 주민과 같이하는 산업, 산업의 후계자가 선망하는 산업으로 탈바꿈을 해야 될 시기라고 판단된다. 한미 FTA 및 한 칠레, 한EU FTA 등 향후 우리 양돈산업은 합쳐 나가야 될 험난한 길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농촌에 걸맞은 농장 환경 조성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한다.

하지만, 우리양돈인 전체가 많게는 30년, 적게는 10여년을 가축분뇨 처리에 쏟아 넣은 경제적 손실은 수조원이 넘는다. 이것은 분뇨처리에 있어 기술적 전문성 결여와 가축분뇨처리정책의 부재인 것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일 것이다.

이제, 가축분뇨처리 문제를 양돈농가의 몫으로만 돌리지 말고, 영구적이고 중장기적인 가축분뇨처리 시스템을 정부차원에서 접근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양돈인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가축분뇨처리에서 탈피하여 농장 경영 및 사양관리에 전념하여 우리 산업을 세계에서 제일가는 양돈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각 지역별, 권역별로 가축분뇨 공공 처리장을 이번 FTA 대책에 확고히 도입하여, 양돈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해야만 한다.

특히 올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통합관리)에 명시된 바와 같이 향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여건에 맞게 공공처리장과 연계하여 지역에서 나오는 가축분뇨를 수거에서부터 퇴비, 액비, 정화처리 시스템을 지역실태에 맞게 병행 처리할 수 있도록 지방 자치 단체에 가축분뇨 이용 및 처리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확고히 부여시켜 주길 바란다. 그렇게 할 때만이 양돈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이 확보되며, 양돈산업과 농촌 환경이 공생할 수 있고, 풍요로운 미래 농촌의 그림을 그릴 수 있으리라 믿는다. **양돈**